

### 환경정책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

환경정책이 규제 위주에서 기업의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간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한뒤 기업들이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월 26일 밝혔다.

환경부 전병성 정책총괄과장은 "업종별 대표자간담회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자율환경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환경관리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특성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이뤄진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업계가 스스로 아황산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권장된다.

환경부는 상수원 지역 등 지역별로는 오염총량제와 연계시켜 특정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단체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기존의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의 환경규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환경관련 각종규제 대폭 폐지

산업자원부는 자체 규제 완화 계획에 따라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ISO 14001)와 환경설비 공제사업, 품질인증 관련 규제 등을 대폭 폐지

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월 3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 심사원 인증기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등의 업무 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한다.

또 산자부장관과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심사원 자격인증을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의 명칭 변경과 업무 휴, 폐지 때 각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한국기계공업협회가 환경설비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관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없어도 환경설비품질인증을 공공기관외에 민간기관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밖에 지역간 형평성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시범사업을 없애고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던 산업환경정책협의회도 폐지할 계획이다.

### 올 환경 뉴스 '그린벨트정책 후퇴'

'그린 벨트 정책의 대폭 후퇴'가 올해 최대 환경 뉴스로 꼽혔다.

28개 환경 사회 단체로 구성된 한국 환경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2월 8일 올해를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이 초래한 '환경 정책의 전면적 후퇴의 해'로 규정하고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린벨트 해제가 국민적인 여론수렴 과정과 전문가 논의를 통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토지이용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환경뉴스 1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위는 영월 '동강댐 반대 운동 확산'이 선정됐다.

협의회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공방’ 뉴스는 3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서해안개펄의 파괴 문제, 예산낭비 우려 등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4위는 ‘팔당호 수질대책의 대폭 후퇴’가 꼽혔다. 수질 개선이나 주민 반발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당초안에 비해 후퇴, 처리됨으로써 상수원 대책의 실효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기상이변 빈발’, ‘환경 호르몬, 유전자조작 농산물’, ‘먹는 물 문제’, ‘야생동물 살리기 운동’, ‘국립공원정책 후퇴’, ‘민간환경단체 위상 변화’ 등이 차례로 주요 환경 뉴스로 선정됐다.

### 정부 온실가스 감축 실천안 마련중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지난12월 8일 경제성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월간 『나라경제』와의 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가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맹국인 우리에게 의무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들도 동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물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상수원 주변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벨트를 이루고 물값이 싸서 누수율이 40%에 달하는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물관리 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물관리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2천3백43억원을 들여 노후수도관 2천5백85km를 개량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3조8천억원을 투자해 4만2천km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이와함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시설 투자에 책정된 연간 6백억원의 세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기후변화협약 강제협약 성격강화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부와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기후변화협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용현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한 환경협약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경제성장속도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협약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 한영수 자원정책심의관은 정부의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기간이 짧고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나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세계인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

고 설명하고 “국내적으로는 전세계인의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 '수돗물 불소화사업' 유보 요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 '구강보건법안'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환경 단체들이 지난 12월 10일 이 법의 제정유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중 제3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의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을 비롯해 경실련, 그린체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환경 단체들은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과 사회적 합의 없이 수돗물의 불소화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수돗물의 불소화가 수돗물의 정수처리를 위한 필수과정이지 아니고 충치 예방효과를 갖는 의학적, 사회적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추진에 앞서 의학적, 사회적, 환경적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소는 체내 축적으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골격불소증이나 치아가 누렇게 변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치아불소증을 일으키는 등 의학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불소용액 양치, 불소치약 등 충치예방을 위한 다양한 불소공급원이 있다는 점에서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의료행위' 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류오염대비 대응협약 가입 시급**

대형 유조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대비 대응협약(OPRC)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환경공학회 강창구 박사는 지난 12월 11일 열린 해양과학기술 학회대회에서 발표한 '대형 유조선 사고 대처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 대형유조선 운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사고 발생시 대비책은 미흡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박사는 일반적으로 기름유출로 인한 대형 해양 오염사고는 개별 국가가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장비부족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면서 효과적인 방제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북서태평양 지역이 세계원유수송량의 26%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발생한 26건의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도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우리 나라도 대형 기름유출사고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만큼 OPRC 가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OPRC 가입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서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협조해 내년중으로 OPRC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0년 채택돼 95년 5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OPRC는 대규모 해상기름유출사고 발생시 국제적인 협력 지원체제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방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 40여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부내 각 부서간 연구, 조사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해양환경이 지구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해양부의 해양조사업무와 기상청의 기상조사 및 예보업무를 합친 '해양기상청' 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환경종합관리시스템 '그린시티' 개발**

대기, 수질 오염원을 원격감시하고 오염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종합관리시스템이 국내서 개발돼 공급된다.

시스템통합(SI)업체인 LG-EDS시스템(대표 김범수)은 지난 12월 12일 다년간의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종합환경관리시스템 '그린시티'를 개발, 환경정보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신공항 종합환경시스템 시범사업, LG화학 및 LG정유의 원격환경관리시스템사업, 국립환경연구원의 4대강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 등 다수의 환경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그린시티는 전국의 하천 및 호수의 용존산소량(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 유기탄소(TOC), 페놀, 수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대기중의 오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유황 등 오염물질을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해 중앙센터에 전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LG-EDS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기존 환경관련 정보 시스템이 오, 폐수나 매연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특정항목만을 단순 감시제어했던 것과 달리, 환경감시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관리 ▲ 오염경보 ▲ 측정장비의 이력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 환경 오염요인을 총체적으로 제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LG-EDS는 그린시티를 이용,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 및 지천 등 9곳을 대상으로 '4대강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수행한데 이어 앞으로 환경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착수**

현대정공이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25분의 1로 줄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리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현대정공 박정인 사장은 지난 12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유리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력 및 프랑스 SGN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리화 기술'은 방사선 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의류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유도전류로 1천3백℃로 가열, 방사성 핵종을 유리 분자 구조 내부에 고정해 안정된 유리 고체화 상태로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 용융로중 가장 균질한 유리 고체화를 생성해 내방사성, 내화학성, 내침출성이 우수하며 ▲ 용융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 처리후 생성되는 유리 고체체가 물리 및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 방사능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현대정공은 밝혔다.

현대정공 등 3사는 1단계로 8백만달러를 투자해 99년 6월까지 대전 대덕 연구단지내에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고 2000년초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2004년까지 고리 원자력발전소내에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상용플랜트를 건설해 2005년부터 국내 방사성 폐기물을 본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국내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능력은 오는 2010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13개 원전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이고 방사능 누출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